



KOSBI

제15-1호 2015. 1. 20

# 중소기업 포커스

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

이슈선정 | 중소기업연구원

책임작성 | 최세경 연구위원(02-707-9833, skchoi@kosbi.re.kr)

※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([www.kosbi.re.kr](http://www.kosbi.re.kr)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## | 목 차

1. 新자금경색 : 금융수익성 악화로 중소기업 자금 '외화내빈' 유발
2. 엔저 장기화 : 환차손과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채산성 악화
3. 임금체계 개편 :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인건비부담 전가 우려
4. 온라인 카니벌라이제이션 : 오프라인 고객 대체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
5. '경제 3불(不)' 재현 : 저성장 늪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퇴행 우려
6. 저유가의 명암 : 세계경기 위축은 위협이나 생산비용 절감은 호기
7. 남북경협 재점화 : 대북 경제특수의 국내여건 성숙과 기회 창출
8. 한중 FTA 발효 : 저가 중국상품 유입은 부담, 거대시장 개방은 기회
9. 스마트 팩토리 부상 : 지능화, 가상화 등으로 생산현장 혁신 촉발
10. 창업 리밸런싱 : 기회추구형 창업 활성화와 창업 안전망 확대

## | 선정배경 및 요약

### ■ '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' 선정 배경과 절차

- 중소기업 대상(CEO 및 임원 대상 307명) 의식조사와 학계·연구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2015년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파악
- 먼저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요인을 '대내요인(국내요인)'과 '대외요인(해외요인)'으로 구분하여 파악
-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슈를 '거시환경(PEST)' 측면에 따라 도출하여 분류
- 마지막으로 대내외 영향요인과 거시환경 측면의 주요이슈를 중소기업의 핵심 가치요소인 '인력', '판로/마케팅', '수출', '금융', '기술', '생산성' 등에 따라 구분하여, 각각 5개의 '경계이슈'와 '활용이슈'를 최종 선정

### ■ 2015년에 중소기업이 경계해야 할 5대 이슈 :

新자금경색, 엔저 장기화, 임금체계 개편, 온라인 카니벌라이제이션, 그리고 경제 3불 재현

- 금융수익성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은 민간금융권의 안정적 대출 경쟁을 증가시켜 자금 접근에서 중소기업 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초래,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담보력이 낮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우려
- 일본 양적완화 확대와 미국 달러 강세 정책이 맞물려 나타나는 엔저 장기화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, 그리고 수출과 매출의 감소 발생
- 통상임금, 근로시간 단축,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본격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, 그리고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납품단가 인하로 작용하는 부정적 효과 초래 가능
- 옴니채널 쇼핑과 모바일 커머스 증가는 오프라인 고객을 대체시키거나 수수료, 광고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소상공인의 수익잠식 효과 발생
- 경기하방 압력과 경기부양 부담으로 우리경제의 '비정상'으로 지적받던 '경제 3불' 재현 우려, 동시에 대기업의 보수적 경영활동과 재벌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·사업구조 개편으로 기업간 협력관계 대변화 예상

■ 2015년에 중소기업이 활용해야 할 5대 이슈 :

저유가의 명암, 남북경협 재점화, 한중 FTA 발효, 스마트 팩토리 부상, 그리고 창업 리밸런싱

- 저유가 가속화는 세계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에게 생산비용 절감의 기회와 함께 저성장 시대에 성장잠재력 향상의 투자 여력을 제공
- 정부의 남북통일 구상은 남북경협 재점화 가능성을 제공하며, 이로 인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이 증가할 경우 내수경기 활성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가능
- 한중 FTA 발효는 저가 중국상품 유입으로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거대시장인 중국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증가 예상
- 스마트팩토리 부상과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은 생산성 극대화과 원가경쟁력 향상 등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여할 전망
- 창업의 질 제고와 창업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기술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존 벤처는 새로운 기회 포착 가능

■ 201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별 중소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

| 이슈           | 중소기업(소상공인·창업가)  | 정부  |
|--------------|---|---|
| 新자금경색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체 자금관리 위기대응체제 구축과 운영</li> <li>• 기술신용평가 대출, 관세납기기한 연장 등 정부지원 적극 활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간금융권의 리스크 수용능력 제고 유도</li> <li>• 부실징후 기업 사전예방 조치 마련</li> <li>• 低신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</li> </ul>              |
| 엔저 장기화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물류비 절감, 공정축소 등 생산성 향상</li> <li>• 결제통화 재조정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 전략적 대응 모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가격 경쟁력 확보와 업종별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</li> <li>• 일본 수출 중소기업 대상의 '환위험관리 시스템' 운영 지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임금체계 개편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추진</li> <li>• 인사·노무 역량 강화로 '일하고 싶은 직장' 조성</li> <li>• 생산현장 혁신 트렌드에 적극 대응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금체계 개편 관련 대응력 지원 (가이드라인, 노사 공동 컨설팅 등)</li> <li>•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,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공급 유도</li> </ul>           |
| 온라인 카니벌라이제이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온라인 마케팅 차별화와 오프라인상권 경쟁력 강화</li> <li>• 협업화로 자체 O2O 플랫폼 구축과 거래 협상력 제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래식 소상공인의 디지털·IT 대응력과 협업화 지원</li> <li>• 적정 수수료 산정 유도, 불공정한 계약 관행 해소 등 추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
| 경제 3불(不) 재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위적 협력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(협력사 확대, 해외시장 진출 등)</li> <li>• 상생협력 주체로서 역할 구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급속한 인위적 협력관계 변화 최소화</li> <li>• 상생협력 추진방향의 구체화</li> <li>• 비정상 거래관행 억지(심층모니터링, 자율시정제도, 신고포상제 등)</li> </ul> |
| 저유가의 명암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업무·생산공정 혁신으로 수익성 개선</li> <li>• 성장잠재력 향상에 대한 투자 확대 (지식기반자본 구축, 신제품 개발, 신시장 개척 등)</li> </ul>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익 재투자 유인 인센티브제 추진</li> <li>• 저유가 피해 업종 중소기업의 지원책 마련(긴급자금 지원, 사업구조 전환 유도, 경영컨설팅 등)</li> </ul>            |
| 남북경협 재점화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북 사업모델 발굴 등 경제협력 사전 준비</li> <li>• 중국, 러시아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자간 사업 적극 모색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남북경협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</li> <li>• 민간차원의 지원·협력 기반 조성 (단계별 시나리오별 로드맵 등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중 FTA 발효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화상품 개발과 기술기반 프리미엄 전략 추구</li> <li>• 디자인·브랜드, 유통채널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에 주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국 진출 업종별 전략 마련과 중국내 지역별 거점화 지원</li> <li>• 한중 FTA 피해 최소화 지원 (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등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| 스마트 팩토리 부상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마트화 플랫폼, 센서, SW 등에 투자</li> <li>• 공정과 공급사슬 혁신과 생산인력 조정 방안 마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마트화 플랫폼 구축 지원</li> <li>• 관련 기술 표준화와 연구개발 지원</li> <li>• 공정혁신 솔루션 및 컨설팅, 그리고 사업구조 개편 유도</li> </ul>        |
| 창업 리밸런싱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식과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창업에 주력</li> <li>• 기존 사업 재전환으로 기회 포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식과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</li> <li>• 기회추구 창업기업의 투자기회 확대</li> <li>• 실패부담 완화 등 창업 안전망 가동 확대</li> </ul>             |

## 1. 新자금경색 :

### 금융수익성 악화로 중소기업 자금 '외화내빈' 유발

#### ■ (배경) 금융수익성 악화로 은행권 대출 경쟁과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

-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순이자마진(NIM)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리스크마져 증가
  -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'13년 평균 1.87%에서 '15년 평균 1.80% 이하로 하락 (출처: 한국은행 금통위)
  - 국내 17개 은행 CEO 중 13명이 '15년 최대 경영화두로 '리스크 관리' 선정(출처: 한국경제)
- 여기에 최근 모뉴엘 사기 대출로 인하여 시중은행의 엄청난 금융 손실 예상
  - 모뉴엘 허위수출 채권 매각규모는 '09년부터 '14년 파산까지 약 3조2천억 원으로 '14년 은행권 당기 순이익 약3조1천억 원을 초과(출처: 관세청)

#### ■ (영향) 안정적인 대출 경쟁으로 자금 접근의 빈익부 부익부 현상 초래

- 은행권은 리스크관리 속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경쟁에 주력
  - 소매금융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대기업 대출은 낮은 예대마진 때문에 우량 중소기업 대출을 놓고 은행권 경쟁 심화
- 반대로 시중은행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과 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민간금융 접근 제약 초래
- 모뉴엘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금융 위축, 단기 수출보험 민간시장 개방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 경우의 자금 부족은 더 심화 예상

#### ■ (대응방안) 자금관리 위기대응체제 마련과 低신용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

- 중소기업은 자금관리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'기술신용평가 대출', '관세 납기기한 연장', '벤처·중소기업 M&A 지원' 등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
- 정부는 민간금융권의 리스크 수용능력 제고를 유도하고, 부실징후 기업 대상 사전예방 조치 마련, 低신용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규모 확대 등 추진

## 2. 엔저 장기화 :

### 환차손과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채산성 악화

- (배경) 아베노믹스 기조 유지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로 엔저 가속화
  - '14년 10월 31일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으로 연간 본원통화 공급량이 80조 엔으로 더 확대
    - 국채 매입 규모를 연간 5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확대하고, 물가상승률이 2%대로 안정될 때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
  - 일본 양적완화 확대가 미국의 달러 강세 정책과 맞물려 원·엔화의 실질실효환율 격차를 더욱 심화
    - 원·엔화 실질실효환율 격차(p) : ('13.1) 18.8 → ('13.12) 33.4 → ('14.12) 41.3 (출처: BIS)
    - 엔·달러 환율 추이 : '08년 1월 110엔 → '14년 12월 115엔, 7년만에 최저치 하락
- (영향) 엔저의 직·간접 영향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
  - 엔저 장기화는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과 매출 감소 유발
    - 엔저로 수익성이 좋아진 일본 수출기업의 투자·생산 확대로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하락
  - 일본산 소재부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를 활용한 중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'엔저발 나비효과' 발생 가능
    - 중국시장에서 국내 소재부품의 시장점유율 감소, 완제품 시장에서 중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승 등
- (대응방안) 원가절감 기반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
  - 중소기업은 '물류비 절감', '공정축소' 등 생산성 향상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'결제통화 재조정', '수출지역 다변화' 등의 전략적 대응 모색
  -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의 '비가격 경쟁력 확보'와 '업종별 수출시장 다변화'를 지원하고, 일본 수출 중소기업 대상의 '환위험관리시스템 운영'을 추진

### 3. 임금체계 개편 :

####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인건비부담 전가 우려

- (배경) 통상임금, 근로시간 단축, 정년연장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
  - 통상임금 확정 판결('13.12.18) 이후, '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(재직자 기준을 둔 경우)'와 '소급 지급의 기준(신의성실원칙 인정여부)' 등에 대한 소송이 지속
  -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'휴일근로'의 '연장근로' 포함 움직임과 그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첩 지급(50% 추가 할증) 가능성
  -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('13.5.22)로 '임금체계 개편 조치'가 '15년에 마련되어야 하나, 법률에 강제 마련 규정이 없어 이를 놓고 노사 간 쟁점 발생
- (영향)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하락과 대기업의 인건비부담 전가 우려
  - 통상임금의 증가, 휴일근로수당 중첩 지급,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60세 연장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하락
    -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연간 3조 4,246억 원,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수당 추가 할증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연간 1조 2,585억 원 예상(출처: 중기중앙회·한국경총)
  - 중소기업의 경우 초과근로 비중이 대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 가능
  - 한편, 중소기업 인건비의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로 대체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의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
- (대응방안) 인사·노무 역량 강화와 생산인력부족 해소에 주력
  - 중소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를 추진하고 인사·노무 역량을 강화하여 '일하고 싶은 직장' 조성, 그리고 공장의 스마트화, 제조업 혁신 등 생산현장의 트렌드 변화에 주목
  -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배포, 노사 공동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생산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·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,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의 다각적 방안을 적극 추진

## 4. 온라인 카니벌라이제이션(Cannibalization) : 오프라인 고객 대체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

- (배경) 옴니채널 쇼핑과 모바일 커머스 증가로 유통과 소비 패러다임 변화
  - 오프라인, TV, PC, 모바일 등 다양한 쇼핑채널을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쇼핑이 최근 급속히 확산
    - 국내 소비자 중 옴니채널을 쇼핑을 즐기는 크로스오버 쇼퍼(Device-free Shoppers)의 비중이 29%(출처: 칸타월드패널)
  - 스마트폰, 사물인터넷, 비콘 등으로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서로 연결하는 'O2O(Online to Offline) 서비스'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쇼핑시장 급성장
    - '14년 모바일쇼핑 시장규모는 13조 2,100억 원으로 전년대비(5조 9,100억 원) 두 배 이상 급성장(출처: 한국온라인쇼핑협회)
- (영향) 오프라인 고객대체 효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잠식 우려
  - 옴니채널, O2O 등은 결제, 주문, 배달, 프로모션(쿠폰) 등의 편의성으로 매장 방문에 의존하는 재래식 소상공인 경영과 길거리상권을 위축
    - 모바일쇼핑의 쇼핑채널별 영향력 : 전통시장 30%, 도심상가 19.1%, 지역중심상가 17.5% 이용 감소(출처: 경기개발연구원)
  - 소상공인이 옴니채널과 O2O 서비스에 참여하여 방문객과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수료, 광고비, 대금회수기간 등으로 인한 수익 잠식효과 발생
    - 모바일 주문앱 서비스 수수료(외부결제수수료, VAT 제외) : '요기요' 12.5%, '배달의 민족' 5.5~9.0% 수준으로 추정(출처: 전자신문)
- (대응방안) 디지털·IT 대응역량을 높이고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 최소화
  - 소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차별화와 오프라인상권의 경쟁력 강화 필요, 그리고 협업화로 '자체 O2O 플랫폼' 구축과 거래 협상력을 제고
  - 정부는 재래식 소상공인의 디지털·IT 대응력과 협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적정 수수료 산정 유도, 불공정한 계약관행 해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



## 5. '경제 3불(不)' 재현 :

### 저성장 늪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퇴행 우려

#### ■ (배경) 한국경제가 소비 침체, 저물가 등으로 저성장 고착 우려

-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침체와 저물가 디플레이션의 압력으로 경제성장률 4% 미만의 저성장이 최근 4년 연속 지속
  -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: '11년 3.6% → '12년 2.0% → '13년 2.7% → '14년 3.4%
- 극심한 내수부진 및 저물가 현상과 함께 '세계경기의 탈동조화(Decoupling)' 현상에 따른 EU와 신흥국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'15년 경제도 하향 전망
  - 한국은행은 '1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.9%에서 3.4%로 다시 하향 조정

#### ■ (영향) 경기하방 압력과 경기부양 부담으로 비정상 거래관행 확산 우려

- 경기하방 압력에 따른 대기업의 보수적 경영활동과 재벌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·사업구조 개편이 맞물리면서 기업간 협력관계의 대변화 예상
  - 삼성, 현대자동차, LG, 한화, 효성, 한진 등 주요 재벌의 3세 경영권 승계 움직임으로 지배구조 개편, 기업 간 대형 M&A 등 본격화
-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 움직임으로 우리경제의 '비정상'으로 지적받던 '3불(시장 불균형, 거래 불공정, 제도의 불합리) 문제가 재부상 가능
  - 최근 TV홈쇼핑사의 재고 물량 떠넘기기, 유통 대기업의 판매수수료 인상과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 또는 불공정 거래관행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상황

#### ■ (대응방안)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균형, 비정상의 정상화 지속 추진

- 중소기업은 협력사 확대, 해외시장 진출 등 인위적인 협력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, 상생협력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적극 구현
- 정부는 급속한 인위적 협력관계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며, 중소기업 성장을 제한하는 비정상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심층모니터링, 자율시정제도, 신고포상제 등 정책 활동 강화

## 6. 저유가의 명암 :

### 세계경기 위축은 위협이나 생산비용 절감은 호기

#### ■ (배경) 글로벌 석유 수급 불균형으로 '美-OPEC 간 저유가 경쟁' 촉발

- 미 셰일(Shale)오일 붐으로 '14년 8월에 자체 원유의 생산규모가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(일평균 1170만 배럴) 수준까지 확대
  - 미 원유 생산 규모 : '08년 일평균 500만 배럴 → '14년 8월 일평균 1150만 배럴
- 미국과 OPEC의 에너지 패권 다툼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이 맞물려 감산 없는 저유가 경쟁 심화, 향후 2~3년간 저유가 지속
  - 두바이유 가격 : '13년말 배럴당 97달러 → '15년 연평균 배럴당 63달러(출처: KDI)

#### ■ (영향) 생산비용 절감의 기회와 신흥시장 경기하락의 위협 공존

- 저유가 지속은 수입 및 생산자 물가를 하락시켜 중소기업에게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유발
  - 국제 유가 10% 하락은 전산업 0.67%, 제조업 1.04%, 서비스업 0.28%의 생산비용 감소 효과 발생(출처: KDI)
- 저유가 더 가속화될 경우 자원보유 신흥국의 경기 둔화, 통화 가치 급락, 자금 유출 등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타격 예상
  - 한국 수출의 지역별 비중은 '14년 기준으로 아세안 14.9%, 중동 6.0%, 중남미 6.3%, 이 중에서 중동, 중남미, CIS 등은 '15년에 수출 감소 전망(출처: 산업통상자원부)

#### ■ (대응방안) 저유가 효과 극대화 대응과 수출 중소기업 체질개선 유도

- 중소기업은 저유가를 계기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업무 및 생산공정 혁신에 주력하고 지식기반자본(Knowledge based Capital) 구축,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 성장잠재력 향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
- 정부는 저유가에 따른 수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, 저유가 피해 업종의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, 사업구조 전환 유도 그리고 경영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책 제공

## 7. 남북경협 재점화 :

### 대북 경제특수의 국내여건 성숙과 기회 창출

#### ■ (배경) 남북통일 준비 담론의 부상으로 남북 경제협력 확대 여건 조성

- 대통령의 '통일대박' 담론 조성으로 남북 경제 교류 및 협력 확대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
  - 대통령 신년기자회견('14년, '15년), 드레스덴 구상('14년), 통일준비위원회 출범('14.5월) 등 '남북통일 준비의 필요성 강조'
- 국가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우려와 맞물리면서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새로운 돌파구로서 주목을 받음

#### ■ (영향) 내수경기 활성화 기회와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회복 가능

-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이 증가하면 북한발 투자, 금강산 등 대북관광 재개 등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 가능
  - 남북협력기금사업비는 '14년에 1조 1,132억 원이나 집행률은 27%로 매우 저조, 즉 남북 경제협력 확대는 상당한 투자와 내수경기 활성화 가능(출처: 통일부)
- 남북 경제협력이 정착될 경우,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성화, 제2의 개성공단 조성, 북한 자원공개발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
  - '15년 개성공단 월 평균임금은 약 150달러로 여전히 중국의 1/3 수준
  - 입주 상장사 10개의 '05년~'13년 연평균 성장률은 매출액 10.16%, 영업이익 11.75%로 고성장(출처: 아세아경제)

#### ■ (대응방안)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민간차원의 지원·협력 확대

- 중소기업은 민간차원의 협력창구를 활용한 대북 사업모델 발굴과 경제협력을 사전에 준비하고, 중국, 러시아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다자간 사업을 적극 모색
- 정부는 통일준비 기조에 따라 남북경협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차원의 지원·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(남북경협 단계별 시나리오별 로드맵 마련, 정부 전담조직 운영 등)

## 8. 한중 FTA 발효 :

### 저가 중국상품 유입은 부담, 거대시장 개방은 기회

#### ■ (배경) 한중 FTA 협상 관련 민간공동 연구 개시 10년 만에 실질적 타결

- '14.11.11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협상이 최종 타결
  - 서문과 총 22개 챕터로 구성, 상품은 일반과 민감 품목군, 그리고 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고, 그 비중으로 품목수와 수입액에 따라 전자는 90%와 85%로, 후자는 10%와 15%를 포함기로 합의
- 한중 FTA로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% 이상에서 관세를 최대 20년 내에 철폐하고, 서비스·투자 분야는 DDA Plus 수준의 양허 확보

#### ■ (영향)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상승, 국내 소비재 중소기업은 피해 우려

- 관세 자율화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나 통관·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 증가 예상
  - 중국 안전인증(CCC) 완화, 48시간 내 통관원칙과 관세위원회 설치, TRIPs Plus 수준의 지적권 보호 등 효과
- 반면, 중국기업이 가격경쟁력이 높은 저부가가치 및 단순가공 품목과 업종의 경우 저가 중국상품의 국내 유입으로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
  - 중국산 대비 국산의 가격경쟁력이 열위인 '섬유제조업', '생활용품', '뿌리산업', '식료품' 등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국내기업 채산성 악화

#### ■ (대응방안) 비가격 경쟁력 향상과 한중 FTA 대응과 활용 전략 마련

- 소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화상품 개발과 기술기반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하고, 디자인·브랜드 가치 제고, 내수시장 유통채널 경쟁력 확보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에 주력
- 정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업종별 전략 마련과 중국내 지역별 거점화 지원, 그리고 한중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, 중소기업의 고수익 사업전환 유도, 소상공인의 사업단위 규모화와 협업화 등 지원

## 9. 스마트 팩토리 부상 : 지능화, 가상화 등으로 생산현장 혁신 촉발

- (배경) 사물인터넷(IoT) 확산, 가상물리시스템(CPS) 등 ICT와 제조의 융합 진전
  - 최근 제조업에 ICT를 적용하여 모든 생산기계·공정·물류·서비스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산업생산 시스템 구축이 이슈로 부상
    - 기술의 진보로 공장이 산업기기와 생산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스마트 센서 사용으로 지능화되는 '스마트 팩토리(Smart Factory)'가 핵심
  -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한 '제4차 산업혁명(Industry 4.0)' 리더에 주력, 우리 정부도 '제조업 혁신 3.0 전략'과 '스마트 팩토리 구축' 시범사업 등 추진
    - 미래부와 산업부('14.6월)는 '20년까지 1만 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추진
- (영향) 공장의 스마트화 촉진에 따른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
  - 전체 생산공정의 최적화·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또는 전환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 예상
    - 스마트 팩토리를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부터 공급망까지 지능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·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
  -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성 극대화, 에너지절감 등 원가경쟁력 향상, 운영환경 최적화에 따른 품질 제고 등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에 기여 가능
    - 주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또는 솔루션 구축 효과로 대략 생산성 향상 30%, 에너지 절감 20%, 사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 10% 등이 제시(출처: 산업통상자원부)
- (대응방안) 스마트화를 투자 확대와 활용을 통한 생산성 혁신 유도
  - 중소기업은 스마트화 플랫폼, 센서, 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, 스마트팩토리 실현을 대비한 공정과 공급사슬 혁신과 생산인력 조정 방안 등을 검토
  - 정부는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, 관련 기술 표준화와 연구개발 지원, 공정혁신 솔루션 및 컨설팅과 이를 통한 사업구조 개편 유도 등 스마트팩토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공

## 10. 창업 리밸런싱(Rebalancing) :

### 기회추구형 창업 활성화와 창업 안전망 확대

- (배경) 벤처·창업 열기 속에 창업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
  - 정부의 '벤처·창업 생태계 조성' 정책으로 창업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주로 50대 이상 고연령 중심의 '생계형 창업'
    - 우리나라 초기창업활동 중 '생계형 창업' 비중은 36.5%로 26개 혁신경제국 평균에 비해 두 배 높고, 유일하게 30%를 초과(GEM, 2013)
    - 50대 신설법인 비중 추세 : '08년 20.5% → '10년 22.6% → '13년 25.0%(출처: 중기청)
  - 기회추구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안전망 등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 증가
    - 창업 5년차 생존율은 유럽 47%, 미국 43%에 비해 한국은 30%로 저조(출처: 중기청)
- (영향) 고부가가치 창업에 대한 기회 증가, 실패부담의 제도적 완화
  - 창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기술과 지식 기반의 기회추구형 창업의 활성화 예상
    - '15년에 정부는 고급 기술창업자 양성과 청년창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업 확산에 주력(출처: 중기청)
  - 연대보증 의무 면제, 성실실패자 재기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창업실패 부담 완화 정책으로 청년, 직장인, 교수·연구원 등의 창업이 보다 증가
    - 정부는 우수 기업 창업자·대표자의 연대보증 의무 면제를 확대시켜 '17년에 연대보증 면제 기업 대상을 3,000개까지 확장 기대(출처: 금융위)
- (대응방안) 고부가가치 창업 기회를 활용하고 창업 안전망 강화
  -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가는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의 기조에 따라 지식과 기술 기반 창업에 적극 나서거나, 기존 사업의 재전환을 추진하여 기회를 포착
  - 정부는 고부가가치 창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, 기회추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와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 안전망 가동 확대에 주력

## 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---

발행인 : 김세종

편집인 : 김세종

발행처 : 중소기업연구원

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 타워 (121-90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://www.kosbi.re.kr>

인쇄처 : 경성문화사

---
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